“대광법 등 개정 총력대응”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 특별법〉

김관영 도지사, “현안 법안 통과 국회활동 만전”

국가첨단산단 후보지 선정 추진부서 격려도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대광법(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광역교통법, 이하 대광법) 등 주요한 과제를 풀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김 지사는 16일 전북도청 간부회의에서 국회 국토위, 보건복지위 등 상임위원회가 다음 주 진행되므로 대광법, 국립의전원법 등 현안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부처와 국회활동에 만전을 기하자고 힘주어 말했다.

전북은 지난해 전북특별자치도법 제정, 새만금사업법·조세특례제한법·역사문화권정비법 개정까지 4대 주요 법안의 결실을 거뒀다. 이 기세를 이어 대광법과 국립의전원법 통과를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이어 김관영 지사는 익산, 완주 국가첨단산단 신규 지정을 위해 노력한 3개 실국(기업유치지원실, 미래산업국, 농생명축산식품국) 담당 공무원들을 격려했다.

김 지사는 “신규산단이 애초 1개 정도 선정될 것이라는 예상을 넘어 익산, 완주 2개소 선정의 성과를 이뤄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도전경성의 자세로 성공했다”면서 “이 자세로 이차전지 특구도 적극 준비해 결실을 거두자”고 강조했다.

한편 김관영 지사는 기금운용본부를 흔들려는 시도에는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공단과 국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전 도민이 한마음으로 뭉쳐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자고 전했다. 특히 중앙 언론을 상대로 한 활동을 강화하자고 덧붙였다.

또한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되어 이미 혁신도시에 이전한 공공기관과의 상생발전 협력이 매우 중요한 시기이므로 실국별 협력사업을 신속하게 발굴하고, 예정된 혁신도시발전위원회 등 내실 있는 회의를 준비하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도의원들의 도정질문과 5분 발언에서 제기된 사항들에 대해 적극 검토하고, 결과와 후속조치를 도의원께 설명하는 등 능동적으로 소통하자고 전했다. /김재훈 기자

16일 전주시 완산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들이 후보자 등록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 왼쪽부터 무소속 임정엽 후보, 무소속 김광종 후보, 국민의힘 김경민 후보, 진보당 강성희 후보, 무소속 김호서 후보.)

4·5 전주을 재선거 후보등록 첫날 후보 5명 ‘도전장’

임정엽·김경민·김호서·강성희·김광종 후보 등록

4·5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자 등록이 시작됐다.

이번 재선거는 이상직 전 국회의원의 당선무효로 치러지며 등록일 첫날 후보자 5명이 도전장을 냈다.

16일 오전 8시 50분경 전주시 완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무소속 임정엽 후보가 가장 먼저 모습을 드러냈다. 임 후보는 미소를 띈 채 후보자 등록을 마쳤다. 뒤이어 국민의힘 김경민, 무소속 김호서, 진보당 강성희, 무소속 김광종 후보도 후보자 등록을 했다.

대부분의 후보는 경제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내걸었다.

먼저, 임정엽 후보는 “로컬푸드를 만든 강력한 추진력으로 전주를 교육과 건강, 일자리 중심지로 바꾸도록 할 것”이라며 “답답한 전주의 대변화를 이끄는 소용돌이가 되도록하겠다”고 다짐했다.

김경민 후보는 “1년 2개월짜리 단기간 자리지만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한다”면서 “전주가 과거 6대 도시로 불릴 정도로 부유한 도시였지만 현재는 가난한 도시로 전락했다. 앞으로 전주를 디지털전주로 전환해 청년일자리 10만개에 이르는 강한 전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호서 후보는 “이번 재선거는 전임자의 비리로 치러지는 불행한 재선거”라면서 “그렇기때문에 전과가 있는 사람을 뽑으면 안된다. 1년 이내 모든 것을 파악하고 맡은 바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잘 아는 사람이 해야한다”고 말했다.

강성희 후보는 “전주의 자존심이 떨어진 지 오래됐다.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말이 아니라 실천이 중요하고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전주의 자존심을 세우고, 대출 금리를 법적으로 낮춰 서민들의 어려움을 반드시 이겨낼 수 있도록 바꾸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광종 후보는 “전주는 조선왕조를 배출한 도시”라면서 “전주를 다시 부응시켜 300만 인구가 육박하는 도시로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별취재반

“노후아파트 주거환경 개선·재건축 지원 강화”

임정엽 전주을 후보 “단지별 지원금 확대…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전액 지원”

임정엽 전주시을 국회의원 후보가 전주지역 중소형 노후아파트의 시설 개선 지원을 강화해 주민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30년 이상 노후 아파트에 대해서는 안전진단 비용 지원을 통해 재건축이 활발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임정엽 후보는 16일 정책발표를 통해 “전주를 위시한 전북지역 아파트 노후화가 심화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행정 차원의 관리·지원정책은 주민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통계청의 주택총조사 자료에 따르면 전북의 아파트 가운데 20년 이상된 노후 아파트 비율은 2021년 기준 53.6%로, 9개 광역자치도 중 가장 높다. 전주의 경우도 52.9%에 달해, 아파트 2채 중 1채 꼴로 노후화가 심각하다.

임 후보는 “전주시가 올해부터 지은 지 20년이 지난 노후 공동주택에 시설 개선 사업비를 단지별로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한 건 칭찬할 만하다”면서도, “다만 전주지역 아파트의 노후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중소형 노후아파트 거주민 상당수가 서민층이라는 점을 고려해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지원액과 부담률도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최대 3,000만원인 단지별 지원금을 최대 4,000만원까지로 늘리고, 시 부담률도 지금보다 10%p 상향해 사업비의 80%까지 지원해야 한다는 것.

예산 지원 범위도 옥상 방수, 외벽 도색 등 아파트 내구성을 위한 보수공사 외에도 조경, 놀이터, 주차장, 휴게시설 등 부대시설 개선 등 입주민의 주거복지를 위해 폭넓게 사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임 후보는 나아가 준공된 지 30년이 넘은 노후 아파트에 대해서는 안전진단 비용을 시에서 전액 지원, 재건축 사업 추진을 용이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는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을 주민들이 부담하는데, 1,000세대 단지의 경우 2억~3억 원, 가구당 20만~30만 원으로 적잖은 돈을 내야 할뿐더러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모금을 해야 해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임정엽 후보는 “관련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2조 2)에는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을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인천과 경기도의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전주시·의회와 협의를 통해 노후 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안전진단 비용을 지원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특별취재반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의 지름길

“대통령 전북공약 이행하라”

전북도-민주 김윤덕 의원 문화·체육·관광분야 공약 점검 토론회 열어

전북도와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이 16일 국회에서 문화·체육·관광분야 대통령 전북공약 점검 토론회를 가졌다.

전북도와 김윤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갑)은 16일 국회에서 문화·체육·관광분야 대통령 전북공약 점검 토론회를 갖고 정부의 전북공약 이행을 촉구했다.

이날 토론회는 대통령 인수위 출범 1주년을 맞아 대통령 전북공약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윤덕 국회의원과 전북도가 공동주최했으며,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지역공약 6개 사업에 대한 전문가 발제 후 열띤 토론이 이루어졌다.

전북지역의 문화·체육·관광분야 대통령 공약은 6개 사업으로 △국제태권도사관학교 설립 △국립 전북 스포츠종합훈련원 건립 △수중고고학 교육훈련센터 건립 △지리산 무진장 연계한 휴양관광벨트 조성 △지덕권 산악관광특구 조성 △휴양과 힐링의 웰니스관광 거점지역 육성 등이다. 〈관련기사 9면〉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발제문을 통해, △국제태권도사관학교 설립의 당위성 및 로드맵(정병기 계명대 교수), △1단계 유소년 스포츠 콤플렉스 건립, 2단계 기능강화, △3단계 스포츠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골자로 하는 단계별 국립 스포츠종합훈련원 건립(정은천 전북연구원 연구위원), △수중고고학 훈련센터의 건립 및 운영 방향(이규훈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수중발굴과장), △지리산 무진장 연계 휴양관광벨트 비전(최영기 전주대 교수), △산악관광 활성화를 위한 과제 및 방향(김형오 전북연구원 연구위원), △차별화된 포괄적 치유(동식물치유, 음식치유 등)를 핵심 콘텐츠로 하는 전북 치유관광의 발전 방향 및 추진과제(이병철 경기대 교수)를 제시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윤덕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윤석열 정부의 전북공약 실천의지를 확인하고, 이행을 촉구하는 자리”라면서, “대통령 공약 이행을 위해서는 정권초기에 사업 방향을 잘 결정하고, 속도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향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로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전라북도의 문화·체육·관광분야의 융성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천선미 전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전라북도는 민선8기를 맞아 전북의 풍부한 역사·문화자원과 휴양·치유시설, 문화·체육인프라 등을 융·복합과, 상호 연계해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전북형 문화·체육·관광거점을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전라북도가 문화·체육·관광산업거점으로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6개 공약 하나 하나의 실천이 중요한 만큼 지역 공약의 실천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전개공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결과보고 채택 결정

도의회 인사청문위 평가 집계결과 60.4점 ‘턱걸이’ 통과

“부동산 거래 의혹에 납득할만한 소명 못해 아쉬워”

부동산 거래 의혹과 관련 자료제출 미비 등으로 도덕성 우려가 불거졌던 최정호 전북개발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결과가 최종 ‘적합의견’으로 결정됐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인사청문위원회 위원들(이하 “위원”)의 의견을 명료하게 모으기 위해서 평가표에 의한 채점방식을 처음으로 도입해 관심을 모았다.

평가표 집계결과는 총 1,000점(업무능력 600, 도덕성 400) 중 업무능력 404점, 도덕성 200점으로 총 604점을 얻었고 평점 환산결과로는 적합기준 평점인 60점을 간신히 넘긴 60.4점으로 나왔다(최고점과 최저점은 평점 산출에서 제외)

위원들은 국토부 고위 관료 출신으로서 최정호 후보자가 지닌 업무능력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주거정책과 교통분야 등에 대한 정부 정책에 대한 이해도와 공기업 사장으로서의 경영능력에 대해서도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반면, 과거 국토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과정에서 불거졌던 부동산 의혹은 이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제대로 소명되지 않고 여전히 오점으로 남게 됐다.

특히, 세종시 펜트하우스 아파트를 특별분양 받아 시세차익을 남기고 매도한 아파트 거래에 관해서는 국토부 부동산실거래 사이트에 미등재 된 점이나 매수자와의 특수관계 의혹이 새롭게 드러나는 등, 오히려 국토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과정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의혹까지 불거져 오점을 남겼다.

인사청문위원회 이병도 위원장은 “이번 최정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은 청문 결과의 명료성 확보를 위해서 평가표에 의한 채점방식을 처음 도입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청문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고 하면서, “후보자가 국토부 차관 출신으로서 국토부 내에서도 신망이 높아 향후 전개공 사장으로서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만 부동산 거래 의혹에 대해서 납득할만한 소명을 하지 못한 점은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

“도민 체감 인구정책 수립·추진을”

김이재 도의원 “인구활력추진단 구성·운영”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이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전주4)이 16일 제398회 임시회에서 전라북도 인구정책에 있어 이제는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을 수립·추진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김이재 의원은 “2000년에 무너진 200만 명의 도내 인구가 2022년에 이르러 180만을 하회한 작금의 현실을 살펴볼 때, 더 이상 중앙정부 주도의 인구정책만을 믿고 바라볼 수 없는 한계상황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현재 전북도는 전국 17개 시도 중 소멸위험에 진입한 4개 시도 중 1곳으로 도내에서는 14개 시군 중 전주시를 제외한 6개 시군이 소멸위험, 7개 군이 소멸 고위험에 처해 있다.

또한,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기준인 인구감소지역에 도내 시군 중 10곳이 해당하며, 1곳은 관심지역이다.

2000년 2만 5천여명의 출생아수는 2022년에 이르러 7천 명으로 추산되고 있어 감소규모는 1만8,000여명, 감소율로는 72.2%이다. 감소율로만 보면 전국 1위이다. 고령화 정도는 23.2%로 초고령사회로 나타났으며, 도내 13개 시군이 이에 해당한다. 초고령사회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30%에 육박하거나 이를 초과하는 시군이 무려 10곳이 된다. 저출산·고령화 심화가 초저출산·초고령화로 나타나면서 지방소멸이 예정보다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김이재 의원은 “한나라 한신이 배수진을 치고, 결사의 각오를 다진 것처럼 새로운 각오로 임해야 한다”며, 전라북도 미래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사람 중심의 의식개선, 인구활력추진단 구성·운영, 재원확보 및 재정지원, 정책사업의 인구영향평가 등 인구정책 수립·추진 활성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전북도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을 수립·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재훈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도의회 특자도 지원 특위 업무보고 청취로 본격 활동

전북도의회 전북특별자치도 지원 특별위원회(위원장 강태창)는 16일 회의를 개최해 특위 활동계획안을 채택하고 집행부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전북형 특례 발굴을 위한 토론회 및 세미나 개최, 특례 입법화를 위한 국회 활동, 전북특별자치도 성공적 출범을 위한 지원 등 특위 활동계획을 확정하고 집행부로부터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보고 받았다.

이 자리에서 특위 위원들은 도의 강점과 특성을 반영한 전북형 특례 발굴이 필요하다며, 특례 발굴 시 기존 농생명 산업뿐만 아니라 전북의 산업 생태계를 전환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특례도 발굴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달리지는 점에 대해 도민들에게 홍보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강태창 위원장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출범을 위해 도와 도의회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한 만큼 도의회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협조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김재훈 기자